

2016년 업무보고

# 법질서 확립

- 정책 추진방향
- 주요 추진과제

불법비리 근절

범죄불안 해소

행복법치 구현

## 국민의 목소리

부정부패에  
엄정한 법의 심판을  
내려주세요

무시무시한 사건이  
너무 많아요  
안심하고 살 수 있는  
사회가 되었으면...

불법 폭력시위  
뿌리 뽑아 주세요

기업인이 마음놓고  
일할 수 있는  
법률지원이  
절실합니다

아이들은 말 못 하는  
동물이 아니에요

범죄피해자  
구조금 규모가  
너무 작아요



국가혁신



불법비리  
근절



법질서  
확립



범죄불안  
해소



행복법치  
구현

# 불법비리 근절

## ○ 부패대응 수사체계 혁신

### |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신설

-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 단위 대형비리 사건 수사

### | 방위사업수사부 신설

- 국방부와 합동수사체제 구축, 방위사업 전반 수사



## ○ 공공부문 구조적 비리 척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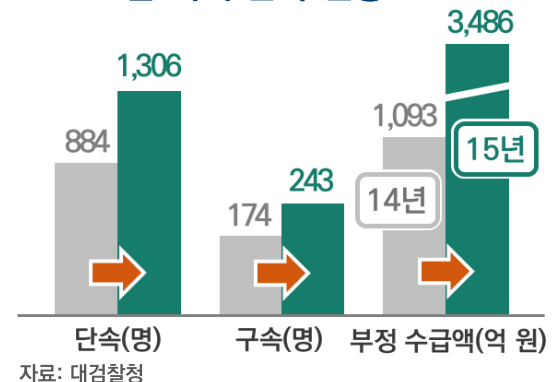
### | 공공시스템 전반의 부정·불법 근절

- 공무원·공공기관의 국고손실 초래, 사익추구

### | 보조금·출연금 집중수사를 통한 예산누수 방지

- 유관기관 정보공유·합동수사, 부정수급 처벌 강화

### • 보조금 비리 단속 현황



## ○ 민간분야 부조리 근원적 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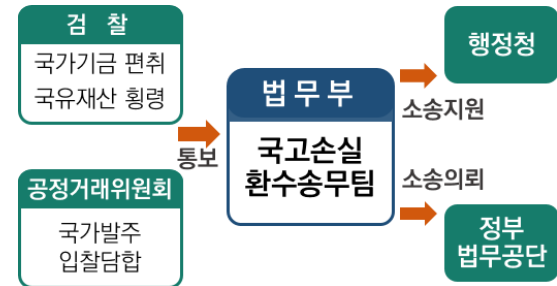
### |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

- 증권범죄·탈세·불공정거래 엄단, 범죄수익 철저 환수

### | 전문직역 숨은 비리 철저 대응

- 교육비리, 법조브로커, 사이비언론 집중단속

#### •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운영



## ○ 범부처 협업을 통한 부패 예방

### | 실시간 부패 감시로 비리 사전 차단

- 동계올림픽·방위사업 등에 대한 감사의 사전 검증

### | 수사로 확인된 부패구조 개선으로 재발 방지

- 부처간 비리원인 정보공유 → 전수조사 → 제도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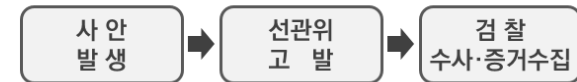
## ○ 총선 대비 엄정대응체제 전환

### |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확대 실시

– 긴급사안에 대해 선관위 고발 전 검찰 증거확보

### | 실시간 선거사범 수사지휘시스템 구축

통상절차



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(긴급사안)



## ○ 불법선거 엄단으로 헌법질서 수호

### |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 집중단속

– 지역감정 조장·비하 행위 처벌규정 신설

### | 구 통진당세력 불법 선거관여 차단

#### • 3대 중점 단속 대상



**금품선거**

선거구 통폐합 과정에서  
의 매수·결탁 등



**흑색선전**

지역감정 조장·비하,  
근거없는 의혹제기 등



**여론조작**

대리투표, 허위답변유도,  
착신전환 중복응답 등



## ○ 빈틈없는 현장대응

### | 불법행위는 초기부터 엄정관리

- 폴리스라인 침범, 도로점거자 추적 검거

### | 불법사태 발생시 선제적 대응

- 현장검거, 해산 등 적극적 대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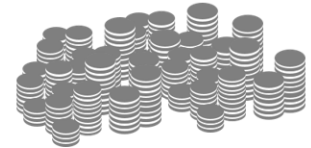
## ●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

불법시위 1회당

연간 총비용(15년)



910억 원



2조 7,300억 원

자료: 바른사회시민회의

## ○ 민·형사상 책임 끝까지 추궁

### |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관철

- 경찰관 폭행, 복면착용, 사다리·밧줄 이용 가중처벌

### | 불법행위자에 대한 빠짐없는 손해배상청구

- 현장채증 강화, 소송지원 인력 증원

국민들은 불법시위꾼한테  
강력한 장관을 볼 수 있기를  
바랍니다.

- '15. 11. 법무부장관 페이스북



# 범죄불안 해소

## ○ 아동·여성 대상 범죄 엄정 대처

- |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 정비
  - 신고의무자 확대,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내실화
- | 여성 대상 폭력 처벌 강화
  - 상습폭력사범 구속수사, 가석방 엄격 심사

가해자가 가석방되었다는  
소식을 들었는데 불안해요.  
저에게 미리 알려주었으면...

- '15. 8. 서울 스마일센터 여성피해자

## ○ 4대 사회악 대응역량 제고

**성폭력** 아동·장애인시설 등 집중수사로 사각지대 해소

**가정폭력** 지자체·상담소 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

**학교폭력** SNS를 통한 집단 따돌림, 언어폭력 예방 강화

**불량식품** 썩은고추, 노인대상 땃다방 등 상습위반 유형 집중단속

### ● 불량식품 집중단속 대상 선별시스템

| 집중단속 대상 |      |       |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-|----|
| 관할      | 업체명  | 단속필요도 | 선별 |
| ○○시     | ○○식품 | 0.81  | ✓  |
| □□군     | □□제과 | 0.11  | -  |

## ○ 생활기반 위협범죄 수사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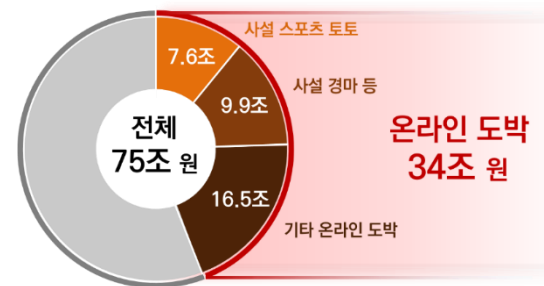
### | 서민경제 위해사범 집중단속

- 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로 엄벌, 취업사기 등 엄단

### | 마약·도박 등 중독범죄 적극 대처

- 불법사이트 단속, 도박 중독치유·재활교육 도입

## ● 불법도박시장 규모



자료: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

## ○ 교통사고 대응 인프라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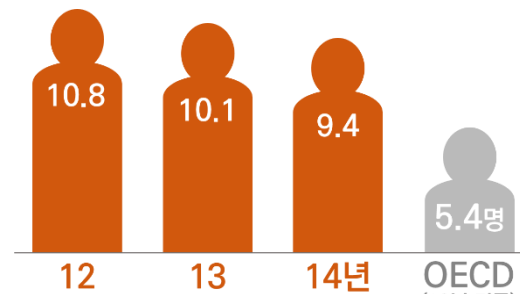
### | 음주 교통사고 처벌 강화

- 구속·구형 기준 강화, 동승자 책임 부과

### | 선진 교통문화 정착 추진

- 배려실천운동 확산, 꼬리물기 등 무인단속 확대

## ●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



자료: 경찰청 (2015년 교통사고통계요약)

### ○ 재범방지 시스템 체계화

#### | 외부정보감응형 전자발찌 개발 완료

- 맥박·체온 등을 분석하여 범죄징후 사전 감지

#### | 스마트워치 등 활용 보복범죄 방지

- 피해자 요청 시 주거지 CCTV 설치

#### ● 스마트워치



### ○ 범죄 유발요인의 선제적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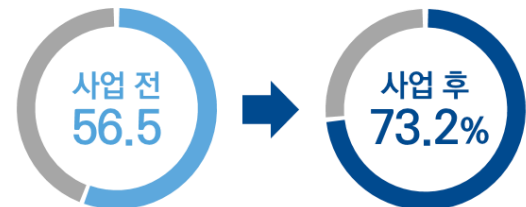
#### | 불법체류자·외국인 범죄자 관리 강화

- 불법체류율 10% 미만 감축추진(15년 11.3% → 18년 9.3%)

#### |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환경개선사업 확대 실시

- 국토부 등과 협업,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참여

#### ● 환경개선 전후 주민안전체감도(15년)



“도로와 CCTV에 색을 입히니  
사건사고가 줄었어요”

# 행복법치 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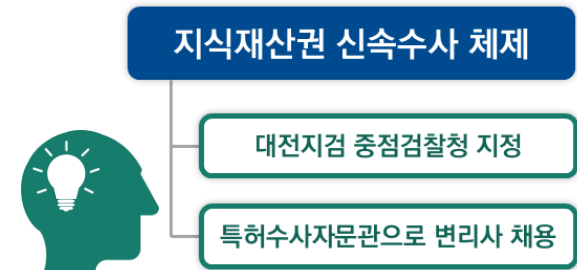
## ○ 중소·벤처기업의 든든한 버팀목

### |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획기적 개선

- 중점검찰청 지정 등 신속수사체제 구축

### | 법률지원 및 소송구조 내실화

-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·9988 지원단 확대



## ○ 관광객 맞춤형 출입국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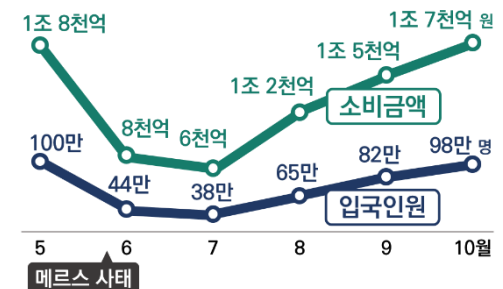
### | 내수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비자정책

- 패션·미용 등 한류산업과 연계된 '한류비자' 신설

### | 관광객 출입국 편의 확대

- 무인출입국심사 및 체류기간 대폭 확대

## ● 외국인 관광객 입국 및 국내 소비 추정금액(15년)



## ○ 법무·법제 한류(K-Law) 확산

### |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확대

- 국내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법적 환경 조성

### | 한국형 전자법무·법제시스템 수출 추진

- 형사사법정보·출입국관리·법령정보 시스템

#### ● K-Law 사업



## ○ 국제중재산업 경쟁력 제고

### | 국제중재 유치 확대로 성장 모멘텀 확보

- 복합중재센터 건립, 국제 친화적 중재법 개정

### |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법률시장 활성화

- 중재산업진흥법 제정, 전문인력 양성

싱가포르 수준으로(연 230건)  
국제중재 유치시 연간 경제효과

**6,000억 원**

자료: 서울국제중재센터



## ○ 국민생활 불편법령 개선

### | 생활밀착형 법령정비 추진

- 현장간담회 개최, 부처 협업으로 신속한 정비

### | 규제법령 집중 정비로 경제활력 증진

- 하위법령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 우선 정비

## ● 주요 정비 법령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집합건물법       | 층간소음 분쟁 완화, 부당관리비 해소 |
|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|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권리금 보호    |
| 상법 시행령      | 영세사업자 상업장부 작성 부담 해소  |

## ○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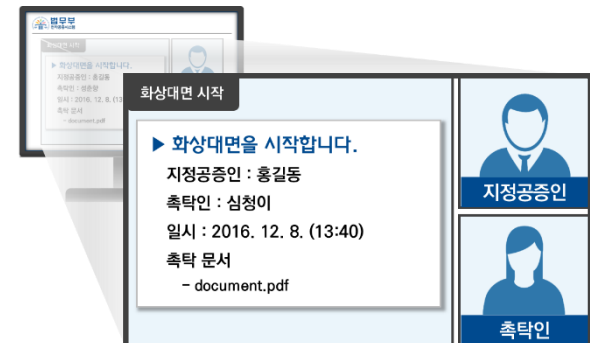
### | 소송외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

-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기본법 제정 추진

### | 분쟁예방을 위한 공증제도 편의성 향상

- 공증대상 확대, 화상공증제도 도입 추진

## ● 화상공증제도



## ○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

### |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

- 치료비·생계비 등 직접지원 확대(172억 원 → 196억 원)

### |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지원 체계 구축

- 스마일센터 전국 10개 지역 설치 완료

범죄가 발생하여  
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 
국가는 이들에게  
빛을 쬐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.

- '15. 11. 법무부 정책위원회

## ○ 취약계층의 따뜻한 법률 울타리

### | 지역 실정 맞춤형 마을변호사 정착

- 지자체와 MOU 체결 등 연계 강화

### | 법률복지 서비스 확대

- 법률홈닥터 증원, 법률구조대상 확대(전 가구의 67%)



미래세대가  
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 
**행복한 법치국가**를  
만들겠습니다.

